
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-41호
(2006. 2.)

石炭産業 長期計劃('06 ~ '10)

2006. 2.

산 업 자 원 부

- 목 차 -

I . 계획 개요	1
II .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	2
III . 석탄산업의 과제	5
IV . 장기 국내 석탄수급 전망	8
V . 석탄산업 장기정책 방향	10

I. 계획 개요

□ 현행 「석탄산업 장기계획('01-'05)」이 '05년말 완료

- 석탄산업법 제3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 장기 계획을 수립
-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 방향,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, 석탄산업의 지원·육성 및 폐광정리, 광해방지, 탄광지역진흥 등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·종합적 계획을 수립

□ 수립경위

- '01. 7 : 「석탄산업 장기계획('01~'05)」 수립
- '04. 11 : 「석탄산업 장기계획('06~'10)」 수립 착수
- '04. 12 ~ '05. 10 :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
용역 실시
- '05. 1 ~ '05. 6 :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
- '05. 10 ~ '05. 11 : 2차례 공청회 개최
- '05. 11 ~ '05. 12 : 「석탄산업 장기계획('06~'10)」 (안) 작성
및 협의

II.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

1.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경과

- 국내 무연탄은 '88년 이전에는 연간 2,400만톤까지 생산
- 그러나 '88년 올림픽이후 경제성장, 청정연료 선호 및 비경제성으로 인해 '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추진
 - 생산량은 비경제탄광의 폐광·감산으로 1/10수준으로 급감
 - * 탄광수 : ('88) 347개 → ('05p) 7개 (△340개 탄광)
 - * 생산량 : ('88) 2,429만톤/년 → ('05p) 283만톤/년 (△2,146만톤/년)
 - * 근로자 : ('88) 62,259명 → ('05p) 5,736명 (△56,523명)
- 이로 인해 탄광지역은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수입 및 인구 감소로 황폐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
 - * '95.2월 사북사태(폐광 근로자해고 반발), '99.12월 태백사태(지역경제 황폐)
 - 강원랜드 설립,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추진
 - * 폐광지역개발사업(5,914억원), 탄광지역개발사업(3,474억원), 폐광지역 개발기금(1,411억원)

2.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

-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소비량이 감소하여, 최근까지는 수급균형 유지
- 그러나 최근 고유가·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가격왜곡 등의 영향으로 등유사용이 연탄으로 회귀하면서 연탄수요가 증가
 - *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'89년이후 단 한 차례 인상

○ 이로 인해 '05년 석탄생산은 2,832천톤으로 감소된 반면, 석탄수요는 4,463천톤으로 수급불균형 발생

- 정부비축탄('05년말 6,942천톤) 등 방출로 당분간('08년까지) 수급은 안정

구분(천톤)	'88	'96	'00	'01	'04	'05(p)	연평균 증가율(%)	
							'88~'01	'01~'05
석탄수요	25,641	4,502	4,159	4,027	3,886	4,463	△13.3	2.6
연탄용	22,926	1,960	1,192	1,230	1,386	2,009	△20.1	13.0
석탄생산	24,295	4,514	4,150	3,817	3,191	2,832	△13.3	△7.2
재 고	10,774	8,937	10,774	10,576	8,894	7,348	-	△8.7

3.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

○ 국내 석탄산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은 매년 5,000억원 내외로 에특회계(투자계정)의 약 40%를 차지

구 분(억원)	'89	'90~'00	'01	'02	'03	'04	'05(p)	계
석탄/연탄지원	1,796	38,672	2,899	3,209	3,023	2,377	2,485	54,461
지역개발지원	-	2,226	1,104	1,099	1,498	1,622	1,838	9,387
기 타	611	8,695	607	407	564	714	861	12,459
계	2,407	49,593	4,610	4,715	5,085	4,713	5,184	76,307

- 특히, 석탄 및 연탄의 생산원가 상승 및 연탄수요 급증으로 최고판매가격과 생산원가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재정부담 가중

[석탄·연탄 생산원가 및 지원단가]

구 분	제조원가	판매가격	재정지원
석 탄 (원/톤)	136,170	89,625 (65.8%)	46,545 (34.2%)
연 탄 (원/개)	388.00	184.00 (47.4%)	204.00 (52.6%)

* 연탄수송비는 별도 지원 : 24.75원/개

○ 또한, 국내 무연탄을 소비하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발전 사업자의 발전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

* 지원현황(억원) : ('01)783→('02)1,457→('03)1,834→('04)1,511→('05)1,688

4. 폐광·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원 실태

- 폐광·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지속 추진
 -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지원
 - 강원랜드 이익금중 일부(10%)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
- 이에 따라, 지역내 도로·하천 등 기반시설 개발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,
 - 타 지역과의 접근성 및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근간인 대체산업의 유치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
- 또한, 폐특법의 적용시한 10년 연장('05→'15) 및 개발사업의 특례보완 등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회복 여건은 마련

5. 석공의 재무구조 실태

- 석공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('89) 추진이후, 구조조정
 - * 생산($\Delta 76\%$, 만톤):('89)522→('05)123, 인력($\Delta 82\%$, 명):('89)13,060→('05)2,343
 - 퇴직금 지급 및 금융비용(연간 450억원내외) 해결을 위한 금융차입('05년말 9,330억원) 증가로 재무구조의 악순환 초래
 - 작업장 심부화 및 노후화 등 채탄여건 악화로 인해 민영탄광에 비해 생산성 저조
-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발생으로 석공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는 실정

Ⅲ. 석탄산업의 과제

1.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

- 국내 무연탄산업은 비경제성 및 청정연료 선호 등으로 인해 '89년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추진중
 - 이에 따라 현재 7개 탄광이 가행중이나, 일부탄광은 채탄 여건 악화 등으로 경영에 애로
 - 반면,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확보경쟁 및 무연탄 수급불균형 심화로 국내 자원 활용의 필요성 제기
- 그러나 국내 무연탄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, 연탄 수요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합리화정책의 성급한 중단은 석탄산업정책의 근간을 해칠 우려

* '05년 생산원가 : (국내탄) 136,170원/톤, (수입탄, CIF) 53~55\$/톤 수준

2. 석탄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

- '01년 이후 수요가 생산을 초과함에 따라 무연탄수급 불균형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
 - 민수용 수요는 120만톤 내외에서 유지하다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며, 생산은 폐광·감산으로 감소하는 실정
 - 이에 '05년부터 정부비축탄 방출로 수급안정을 도모중이나 연탄수요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차질 예상
- 따라서,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

3. 국내 석탄산업의 재정부담 완화 필요

- 국내 석탄산업과 관련한 재정지원규모는 한정된 예특회계 세입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
 - 또한, 연탄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애로
- 이에 따라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이 요구됨

4. 가격구조의 왜곡 시정을 위해 가격현실화 필요

- 장기간에 걸친 연탄가격 동결 등의 영향으로 시장왜곡 심화
 - 연탄판매가격은 '89년이후 단 한 차례 인상('03년, 10%)된 반면, 타 에너지원(등유 등)은 계속 상승하여 에너지원간 가격차 확대
 - * 연탄가격(공장도기준) : ('89)167.25원/개 → ('05)184원/개 < 10% 인상 >
 - * 등유가격(정유사기준) : ('89)159.72원/ℓ → ('05)801.21원/ℓ < 402% 인상 >
 - * LNG가격(도매기준) : ('89)146.73원/m³ → ('05)444.35원/m³ < 203% 인상 >
 - 이로 인해 연탄지원단가가 약 80배 상승하는 등 시장왜곡이 심화되어 연탄수요 증가 및 사회적 비효율 초래
 - * 연탄지원단가 : ('89)2.50원/개 → ('05)204원 <수송비 24.75원/개 별도지원>
- 따라서, 석탄 및 연탄가격은 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

5. 석탄산업관련 공적기관 기능조정 필요

- 석공의 재무구조 악순환이 경영부실 심화 및 기능상실 우려
 - 현재 추진중인 석공의 자구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한계
 - 다만, 석공의 경영정상화는 석공의 존립뿐 만 아니라 국내 석탄산업의 근간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
 - 따라서, 석공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석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실정
- 또한, 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법 시행('06.6.1일)시기에 맞추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재편 예정

6. 대북 무연탄 협력방향의 재검토 필요

- 국내 무연탄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은 현실적으로 곤란
 - 특히, 국내 연탄수급 균형을 위한 비축탄의 방출규모 확대 및 추가적인 재정부담 초래
 - * 현 수요추세일 경우 향후 5년 이내 비축탄 소진전망 (에너지경제연구원)
 - * 연탄에 포함된 재정지원('05) : 총 396.25원/개 [석탄보조(167.50), 연탄보조(204), 수송보조(24.75)]
- 이에 따라 대북 석탄산업 협력은 지원에서 상호협력으로 개념 전환이 요구
 - 북한내 연료의 자급체제 구축 지원 및 국내 무연탄 수급 균형도모 등의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

IV. 장기 국내 석탄수급 전망(에너지경제연구원)

1. 수요예측

□ 예측 전제

- 민수용은, 경제성장율과 상대연료 가격비를 적용하여 산정
 - 경제성장률은 '06~'10년간 **년4% 증가** (KDI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조정)
 - 상대가격은 **등유/연탄의 상대가격비를 적용** ('81~'05)
 - * 연탄 소비자가격은 공장도가격 동결외 수수료 등을 감안, 연평균 4.0% 증가 가정
 - * 등유가격은 유가상승을 감안하여 3.41% 증가 가정
- 발전용은, “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('04~'17)”에 의한 **발전용 소비계획량을 토대로 수정**
- 산업용은, “중·단기 에너지수급 전망연구” 결과를 반영

□ 수요 전망

- 연탄가격을 동결할 경우, 등유/연탄의 상대가격비 차이로 인해 연탄수요는 연평균 **11.1% 증가 전망**
- 발전용 수요는 정책적으로 **현 수준인 2,356천톤 유지전망**
 - * 다만, 무연탄발전소 폐지시는 감소 예상 : 영동 #1('13년), 서천#1,2('14년)
- 산업용 수요는 연평균 **0.8% 증가 전망 (연간 15만톤 내외 유지)**

[중장기 수요 전망(천톤)]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연평균증가율(%)
민수용	1,985	2,331	2,626	2,868	3,059	11.1
발전용	2,356	2,356	2,356	2,356	2,356	-
산업용	147	148	149	150	152	0.8
총수요	4,488	4,835	5,131	5,374	5,567	5.3

2. 생산 예측

□ 전제 : 개별 탄광들의 장기 생산계획을 토대로 중장기 생산량 추정 (석탄협회 협조)

* 재정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석탄산업 특성상, 이론적 생산추정에 한계

□ 생산 전망

○ 7개 탄광에서 매년 2,753천톤으로 생산 전망

* 석공 3개탄광(장성, 도계, 화순), 민영 4개탄광(경동, 태안, 태백, 성하)

○ 다만, 개별 탄광여건(부존상태, 채산성 등)에 따라 생산계획이 변동될 가능성 잠재

[중장기 생산 전망(천톤)]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	비고
생 산	2,753	2,753	2,753	2,753	2,753	※ 폐광·감산으로 생산감소 가능
- 석 공	1,233	1,233	1,233	1,233	1,233	
- 민 영	1,520	1,520	1,520	1,520	1,520	

3. 중장기 석탄수급 전망

○ 現 석탄산업 지원제도 하에서는 국내 무연탄의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전망

○ 이로 인해, '09년경에는 국내 재고탄이 소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절실

[중장기 석탄수급 전망(천톤)]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연평균증가율(%)
수 요	4,488	4,835	5,131	5,374	5,567	5.3
생 산	2,753	2,753	2,753	2,753	2,753	△0.8
과부족	△1,735	△2,082	△2,378	△2,621	△2,814	-
재고(누적)	5,613	3,531	1,153	△1,468	△4,282	-

V. 석탄산업 장기정책 방향

1. 기본방향

□ 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기조는 유지

○ 국내 무연탄산업의 체계적인 정비·육성을 위해 폐광지원 제도는 유지

-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범위내에서 무연탄산업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

* 가행중인 탄광의 생산성(OMS) 향상 및 경영여건 제고 등 도모

○ 무연탄·연탄 최고가격의 단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으로 적극적인 수요조절 추진

- 특히, 연탄가격보조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영세가구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

□ 탄광지역 개발지원 체제 개선으로 지원효과 제고

○ 경제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분야에 우선 지원

- 지역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기존의 도로·하천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대체산업 유치·육성으로 전환

○ 사후관리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

□ 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제 및 관련제도 정비 등

2. 중장기 무연탄 수급안정화 대책

<기본 방향>

- 국내 무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·수요관리를 동시에 추진
 - 생산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결과에 의거 조정
 - 수요는 생산과 균형이 되도록 적극적인 수요조절

□ 합리적인 무연탄 생산체제 조성

- 대내외 에너지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생산규모로 관리
 - 비경제탄광의 자율 폐광을 위한 폐광지원제도는 계속 유지
- 무연탄산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 생산을 위해 투자 환경 조성

□ 적극적인 수요조절로 수급안정 도모

- 가격매커니즘에 의한 시장기능을 제고하여 연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정
 - 연탄수요는 연간 약 100만톤 내외로 유도
- 연탄수요 증가로 무연탄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,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용 수요를 신축적으로 조정

□ 무연탄의 적정재고 개념 도입

- 대내외 에너지수급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비축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

<참 고>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방안에 의한 수급전망

			2006	2007	2008	2009	2010	증가율%
수 요	(A) 연탄수요	Asc1	1,985	2,331	2,626	2,868	3,059	11.1
		Asc2	1,856	1,933	1,850	1,695	1,413	△6.6
		Asc3	1,806	1,787	1,594	1,308	1,004	△13.7
		Asc4	1,758	1,655	1,375	1,031	711	△20.3
	발전용수요(B)		2,356	2,356	2,356	2,356	2,356	-
	산업용수요(C)		147	148	149	150	152	0.8
총 수 요	D1 : Asc1+Bsc+C		4,488	4,835	5,131	5,374	5,567	5.5
	D2 : Asc2+Bsc+C		4,359	4,437	4,355	4,165	3,921	△2.6
	D3 : Asc3+Bsc+C		4,309	4,291	4,099	3,814	3,512	△5.0
	D4 : Asc4+Bsc+C		4,261	4,159	3,880	3,537	3,219	△4.7
생산(E)	Esc	2,753	2,753	2,753	2,753	2,753	-	
누적재고 (F)	F(sc1)		5,613	3,531	1,153	△1,468	△4,282	△49.7
	F(sc2)		5,742	4,058	2,456	1,044	△124	△43.3
	F(sc3)		5,792	4,254	2,908	1,847	1,088	△34.2
	F(sc4)		5,840	4,434	3,307	2,523	2,057	△23.0

주) 1. 연탄수요 Asc1 : 가격 동결시, Asc2 : 가격 15% 인상시, Asc3 : 가격 20% 인상시, Asc4 : 가격 25% 인상시

2. 발전용 수요 Bsc :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일부 수정

3. 산업용 수요 : 연평균 0.8% 증가 가정

4. 생산 Esc : 현 지원제도하

5. 재고수준

재고 Fsc1 : 생산Esc + 총수요 D1, 재고 Fsc2 : 생산Esc + 총수요 D2

재고 Fsc3 : 생산Esc + 총수요 D3, 재고 Fsc4 : 생산Esc + 총수요 D4

3.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체계 개편

<기본 방향>

- 국내 무연탄 및 연탄가격의 점진적 현실화를 통해 시장기능 회복 추진 (*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및 거래량 결정)
- 다만, 영세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

□ 시장기능 회복을 위하여 석탄판매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

-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 하되, 원가인상분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
- 무연탄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는 폐지하되, 품질향상 등을 위해 등급별 가격고시제도는 당분간 유지

□ 연탄보조는 생산자지원에서 소비자지원으로 전환

- 연탄최고가격의 단계적인 인상으로 사회적 비효율을 방지 하여 재정부담 완화 및 시장왜곡 해소
 - 가격매커니즘에 의한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, 우선 연탄가격제도를 단순화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연탄가격 완전자유화 검토
- 연탄보조제도는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영세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
 -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영세가구의 생계부담을 감안, 직접 보조 검토 추진

4.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

< 기본 방향 >

-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연장 및 개발사업의 특례 보완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기반 마련
- “기업하기 좋은 환경” 조성을 통해 대체산업 유치 촉진

□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운영효율화 도모

- 폐광지역의 주민소득·후생복지 증대 및 관광휴양지 조성 등에 '01년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속 추진
 - * 탄광지역(7개): 강원도(태백,삼척,정선,영월), 충북(보은), 경북(상주), 전남(화순)
-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발 및 환경개선 등에 투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규모 확대
 - * (기존) 카지노업 이익금의 10% → (변경) 카지노업 이익금의 20%
-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융자지원 등을 제고
 - * 창업융자지원(억원) : ('03) 120 → ('04) 96 → ('05) 45 → ('06p) 100
 - *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(억원) : ('04) 34 → ('05) 110 → ('06p) 50

□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

-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추진
 - 중장기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(농업·식품 등)·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폐광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 기반 조성
 - 폐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생활기반 조성

- 지역의 고유자원 활용 및 내생적 발전 유도를 통한 지역 자생력 극대화 추진
 - 지역개발사업은 경제성 분석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유도
-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지표 개발
 -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지역별 중복성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평가제 도입
 - 성과지표를 토대로 재정지원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지원효과성 제고

□ 폐광지역내 대체산업 유치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

-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적용시한 연장('05→'15)
 -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·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전 지원
 -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
- 폐광지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형 기간교통망(38국도) 건설을 관계부처와 협의, 조기 완료
 - * '94~'08(15년)간 2조3,623억원을 투자하여 제천IC~동해간 도로 확·포장 계획
- 해당 지자체별로 대체산업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·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대체산업 발굴
 - 진흥지구를 3개 지역으로 구분, 대체산업 투자 지원
 - * 1지역(정선·태백·삼척)은 강원랜드의 부대시설 분산(단, 삼척은 거리상 제외)
 - * 2지역(영월·문경) 및 3지역(보령·화순)은 대체산업투자법인 설립운영

5. 광산 안전관리 및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

<기본 방향>

- 광산의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광산재해방지의 효과성 제고
- 광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광해방지정책 추진
 -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

가. 광산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의 효과성 제고

- 광산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
 - 취약지구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노·사 합동 안전진단 등을 통해 광산안전관리 지도·감독
 - 광산시설 점검위주에서 광업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위주로 전환
- 광산안전 교육·훈련 활성화를 통해 위기대응 능력 제고
 - 광산근로자에 대한 현지순회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강화로 안전교육·훈련과정 내실화
 - * 교육인원(명) : ('01)460 → ('02)475 → ('03)420 → ('04)390 → ('05)380
 - 광산의 심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
 - 영세규모 중소탄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주문형 맞춤형교육 및 재해사례집 등을 발간·배포
- 취약지역 전담관리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대형사고 방지에 철저

나.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는 광해방지사업 추진

-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광해방지시설을 친환경적 시설로 전환 추진
 - 광해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광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의 정도(공동이용시설, SOC시설 등) 등을 감안, 단계적으로 추진
 - * 광해발생현황 : 총 2,006개(가행광산 732, 휴·폐금속광 936, 폐탄광 338)
 - * 휴·폐금속광 936개중 '06~'10년간 59개 광산(115개소)에 1,000억원 지원
 - 관계기관(중앙부처, 지자체 등) 및 사회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
-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
 - 광해방지사업을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정비
 - * 광해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'06년초 제정(법 '05.5.31일 제정)
 -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하여 범 국가적인 광해방지 기본계획(5개년) 및 실시계획(매년)을 수립·시행
 - * 폐광산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
- 광해방지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환경피해 방지 철저
 - 광산개발 초기단계부터 폐광 이후단계까지 광해방지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·수행하는 광해방지사업단 설립
 - 전문광해방지사업자제도 및 사업자실명제도 등을 도입하여 광해사업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
 - * 전문분야 : 산림복구, 수질정화, 지반침하방지, 토양정화 등 7개

6. 석탄산업관련 공적기관 재정립

<기본 방향>

- 대한석탄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연계한 재정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
-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광해방지사업단에 흡수

가.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도모

- 석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
 - 합리적인 인력재배치 및 인력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자원개발 등 사업다각화 추진
 - 작업장 설비현대화 및 집약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제 경비 절감 도모
- 석공의 차입구조 개선 및 유동성 제고 노력 강화
 - 재무구조를 개선을 위해 석공의 자구노력과 연계한 적정 재정지원 검토 추진

* 석공에 대한 재정출자현황 : '05년말 현재 2,000억원, '06년 450억원 추가

나.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해체 및 개편

-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기능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이관
 - 광해방지사업과 아울러,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한 석탄 산업 지원기능 병행수행